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 사상과 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고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한편에서는 고하에 대해 문화 민족주의자, 자유 민주주의자, 정당 다원주의자, 정치 현실주의자로 평가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자본과 대지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족주의 우파 내지 타협적 민족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현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또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기억되고 있다.

오늘은 고하에 대한 평가를 넘어 고하가 생각하고 걸어갔던 길의 역사적 실상에 대해 실증적 차원에서, 그렇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고하가 수용한 근대 사상의 기반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잘 알다시피 고하는 1910년대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일본 유학생 출신이다. 당시 일본은 1912년 말의 다이쇼정변 혹은 제1차 호헌운동을 계기로 일본을 지배하던 번벌 특권세력과 특권적 정치사회 질서에 반대하여, 언론의 자유와 여론에 기반한 정치질서, 의회 민주주의체제 및 정당정치에 근간한 정치체제의 수립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요구와 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움직임이 정치는 물론 사회 및 학문, 예술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이는 192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대학 강단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하는 대학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사상을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유주의적 지식인, 정당인들이 주도하는 각종 언론과 대중집회에 적극 참석하여 그 분위기를 몸으로 직접 체득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표적 지식인인 민본주의자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를 비롯해서 자유주의 지식인들 및 헌정회 계열의 정치가들과 일정하게 교류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민주주의 사상은 단순히 고전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자본의 독점화 및 중소 상공인의 몰락, 주기적 불황, 노동자 농민들의 극심한 빈곤,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등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위기가 심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에서 변혁하려는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을 비롯한 다양한 수정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나타났고, 이들 사상이 지식인과 언론인 등을 통해 일본에 소개되고 있었다. 이들 사상은 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지향하고, 대중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주장하면서, 국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개혁적 사상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조화와 공동선을 추구하고, 급격한 혁명적 변혁대신에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민주적 제도 내

에서 해결하려고 하며, 자유주의의 원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내적 이념이었다. 고하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서구와 일본의 다양한 수정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섭렵하여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민족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고하는 선진국가의 자본주의 성숙에 따라 강대민족의 지배가 무력적·정치적 정복에서 경제적·자본적 정복으로 변환하고, “정복보다는 회유, 위압보다는 착취”의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현대의 정복된 약소민족은 자유의 고통보다도 생존의 위협에 더 심하게 처해있다고 하면서, 자유를 부르짖던 민족운동이 반드시 생존권 문제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자유는 평등에 있고 평등의 기초는 생존권의 보장”에 있다고 하여 “생존권이야말로 평민문화의 토대가 될 것이며 核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일제하 한국사회가 직면한 빈곤과 평등의 문제, 분배와 기회균등의 문제 해결을 신국가 건설의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이러한 고하의 인식은 그가 단순히 대자본가나 지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 근대 사상의 기반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민족주의세력 주도로 근대 신국가 건설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하는 공산주의세력 주도의 신국가 건설은 명백히 반대했지만, 당면 민족혁명과 근대국가 건설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의회적 정치질서를 수용한다면 사회주의자들도 폭넓게 포용하였다. 쑨원(孫文)은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의 수립, 국공합작의 일련 과정을 통해 중국 근대국가 수립의 상징적 인물로 중국과 대만 모두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인데, 고하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인물이 쑨원이었다.

두번째는 고하의 근대국가 사상에서 전통사상이 갖는 의미이다. 고하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의병장 기삼연에게서 민족의식과 함께 성리학을 수학했다. 기삼연은 위정척사파의 대표적 인물인 기정진의 제자였다. 그렇지만 고하는 일본 유학을 통해 고루한 주자학, 전통적 성리학의 타파를 주장하게 된다. 그는 유교사상이 ‘慕古사상의 원천’으로 ‘인문진보의 원리에 배치’되며, 정치적 인간인 民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전제사상의 단서’로 ‘자치 권리의 평등정치를 실현하는 현대조류’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고, 동시에 사상의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문명사상에 반하는 ‘배타사상의 표현’이라고 맹공하면서 유교사상의 타파가 시대요구의 급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봉건적 혈연질서와 특권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봉건제 가족제와 강제연애의 타파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고하는 유교사상 대신에 ‘國粹’ 발휘와 단군 숭배를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단군 숭배는 종교적이거나 국수주의적 숭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계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필요한 근대 민족의식을 한국인들에게 일깨워주고 민족의 단합을 이루는 상징물이자 민족구심체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國粹’ 인식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무함으로써 역으로 근대적 자각, 근대적 사상 개혁을 강조했던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식민지에서 서구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사상의 수용만으로는 자주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하는 일찍이 깨우쳤다. 그는 일본과 중국의 근대 국가 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서, 또한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독자적인 사상적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확립하는 것이 민족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자립적 근대국가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고하는 당대 양명학의 대가이

며 최고의 조선학 연구자였던 위당 정인보와 협력하여, 근대사상으로 새롭게 해석된 혁신 유학으로서의 양명학의 소개, 조선후기 실학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확산, 조선역사에 대한 재조명, 國朝信仰이나 민족 위인들의 유적지 보전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민족의 사상적 기초공사를 세우는 것으로, 조선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제고함으로써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 ‘조선적인 것’의 결합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근대국가 건설의 독자적 사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위당 정인보는 일제 말기 고하가 정치적 은둔에 들어갔을 때에도 창동에 같이 은거하였던 사람 중 하나였고, 고하가 암살될 때까지 정치적·사회적 행보를 같이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고하를 가장 훌륭한 정치가로 여겼다.

세번째는 고하가 일제하에서 추진했던 운동 노선과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일부 연구들에서는 고하가 1920년대 타협적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두 가지 점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는 일제하에서 타협적 자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세력으로 각과유지연맹, 국민협회 등 친일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는데, 고하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계열은 이들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서구 민주주의 운동의 경험과 아일랜드의 민족운동의 경험을 통해 대중적 차원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1920년대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과 처지가 같은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 식민지, 그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조선과 자주 비교되었던 아일랜드의 민족운동은 1922년 아일랜드자유국 수립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단순히 영국과의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아일랜드 민족운동을 주도하던 신플레인당의 전투적 민족운동의 산물이었다. 동아일보 계열은 타협적 자치노선을 주장하다가 몰락한 아일랜드 민족당에는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전투적 민족주의 정당의 성격을 갖는 신플레인당내 온건파의 현실주의 노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제로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거의 보장하지 않는 기만적 통치인 1920년대 일제의 ‘문화정치’ 공간에서, 최소한도로 열려진 정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고하는 1920년대 전반부터 민족적 중심세력론, 민족적 중심단체 결성론을 주도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런 주장은 1920년대 중반 일본에서 헌정회 내각이 들어서고 보통선거 실시가 가시화되면서, 또한 중국 국민당의 북벌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민족운동의 정치단체 결성으로 구체화되어 가는데, 이는 일제하 최대 민족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의 전사를 이루는 운동과정이었다. 고하는 1926년 11월, 3·1운동을 기념하는 기사를 동아일보에 게재한 혐의로 일제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신간회 창립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그가 주도하던 동아일보는 신간회 창립을 전후로 한 국제정세를 조망하면서 신간회 운동방침과 관련한 제반 논의를 구체적으로 지속하고 있었다. 고하는 1927년 말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을 제기하면서 서북지역 기독교세력과 함께 신간회에 참여한다. 그러나 고하는 합법적 조직 결성에만 머물렀고, 국외 운동과 연결하여 비합법적인 민족운동 조직을 결성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민족운동가로서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1930년 초부터 31년 해소 때까지 신간회 중앙지도부를 끌어가던 것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였는데, 그는 1910년대 일본 유학시절부터 시작해서 해방 후까지 고하의 오랜 동지였다. 가인은 우리 ‘역사의 인

물'로 율곡과 고하 두 사람을 꼽을 정도로 고하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둘 사이에 입장이 갈리거나 행동을 달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네번째는 고하가 민족운동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찍이 일본 유학시절부터 고하는 당시 제일 유학생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제일 유학생들의 모임인 학우회가 결성되는 과정과 학우회의 기관지로서 1910년대 역사와 민족운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 『학지광』을 창간하고 초기 논지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고하였다. 유학의 경험을 통해 근대 서구사상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세계정세의 변화를 직접 체험한 새로운 민족엘리트, 민족운동가들이 신지식층을 형성하면서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운동에 전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고하는 이들 중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하는 3·1운동 독립선언서의 33인 민족대표로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유학생과의 연락과 각종교계 세력의 연결 등, 3·1운동의 기획과 초기 확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민족대표 48인중 1인 이었다. 일제하 민족운동 세력은 일제가 강점기 내내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당을 결성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일제하 민족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과는 달리 대체로 종교계와 언론계 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하였다. 기독교 계열에는 기호지역 기독교세력이 있었는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동지회·홍업구락부가 대표적 조직이었다. 또한 서북지역 기독교세력이 있었는데,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홍사단·수양동우회 및 조만식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대표적이었다. 천도교 계열에는 천도교청년당과 조선농민사를 기반으로 한 다수 세력 신파와 천도교청년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소수 세력인 구파가 있었다. 국외세력으로는 김구와 조소앙으로 대변되는 한국독립당이 대표적이었다. 이들과 더불어 민족주의 세력의 일익을 담당한 것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결집한 언론계 세력이었는데, 이들은 호남지역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고하는 1921년 그가 동아일보에 관여할 때부터 1937년 6월 이전까지, 중간에 약간의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신문독재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동아일보의 거의 모든 경영과 편집 활동을 사실상 관장하였다. 그 때문에 동아일보에 다양한 경향의 기자와 논설진들이 거쳐가면서 다양한 기사와 논설이 쓰여졌지만, 동아일보의 입장을 반영하는 주요 사실과 논설들은 대체로 비슷한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하 동아일보는 일반 보도만 하는 신문이 아니었다. 창간시 사시(社是)로서 '민족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한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처럼, 고하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 정치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인 동시에 민족운동의 주요 의제와 방향을 이끌어가는 민족운동의 주도지였다. 그렇지만 손기정 일장기말소사건을 계기로 총독부에 의해 고하가 동아일보의 일선에서 반강제로 물러나면서, 동아일보는 일제에 굴종하는 오욕의 역사를 남기게 된다. 일제 하 민족주의 세력도 도산 안창호를 비롯한 지도 인사들이 민족운동과정에서 돌아가시고, 다수 인물들이 일제 말기 친일로 돌아서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고하와 그 주변 인물들은 지조를 지키면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고하는 일제시기 조선을 대표하는 '政客'으로 자주 묘사될 만큼 일제 하 민족운동에서도 뚜렷한 정치적 입지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런 고하의 정치적 능력은 광복 직후에 바로 빛을 발하게 된다. 고하는 한국민주당의 결성과 초기 활동에 수석총무

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초기 한민당은 지역적·분파적 대립으로 화합하지 못했던 일제하 주요 민족주의세력의 대부분이 망라되고, 심지어 사회주의운동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우파세력도 상당수 가담한 강력한 정당으로 출범하였다. 또한 고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을 앞장서서 확산시키면서 좌익의 국가건설 운동에 대항해서 임정을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 수립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국민대회준비회를 조직하여 장차 수립될 신국가 의회 조직의 모태를 준비하려고 했다. 광복직후 국내 민족주의세력 중에 고하에 견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였고, 우남 이승만과 백범 김구에 필적할 만한 지도자로 고하가 논의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고하는 눈을 감게 되었다. 고하 사후에 우익 3당의 합동운동,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설립과 과도정부 수립, 제헌헌법과 대한민국의 탄생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그 원형이 이미 1945년 고하의 활동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하가 남긴 역사적 자취를 탄신 125주년과 서거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윤덕영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

한국사학회 이사 역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장 역임.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